



## 국민연금제도의 성과와 향후 과제

**문형표**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올해로 2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간 국민연금은 노후소득의 적정성과 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 왔습니다.

먼저 적정성 강화를 위해 제도에서 배제된 영세 사업장 및 지역의 성원들을 제도 내로 포섭하려는 적용확대 노력이 이루어졌습니다. 주지하듯이 국민연금제도는 도입 당시 상대적으로 관리가 용이한 1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업주를 우선 대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후 적용대상 확대라는 일관된 정책목표 하에, 1992년 상시근로자 5-9명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가입대상으로 포괄한 것을 기점으로, 1995년 농·어촌지역(군지역), 1999년 도시지역 등으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비로소 '전 국민 연금시대'가 열리게 되었습

니다. 또한 출산이나 군복무 등과 같이 사회적 유용성을 담보한 행위로 인해 납부예외로 분류되는 기간에 대해 수급권을 일정 정도 인정해주는 연금 크레딧 제도가 2007년에 도입되었고, 이에 더해 최근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최대 1년까지 국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는 실업 크레딧 제도가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는 국민연금 가입 유인이 상대적으로 낮은 영세사업장 가입자의 제도 진입을 장려하기 위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2015년 12월 현재 총 누적 순계 기준 906,244개소의 사업장에서 2,963,244명의 근로자가 사회보험료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적정성 강화조치는 노후

소득을 실질적으로 확충하는데 초점을 두고 이루어져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사회보험방식 국민연금제도에서 적정 수준의 기여와 수급권 축적에 실패한 사람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제도가 2008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동 제도는 적용대상 및 급여수준의 확대 과정을 거쳐 2014년부터 기초연금제도로 개정되어 시행 중입니다. 이를 통해 전체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66.8%(2014. 12.) 정도가 평균 181,486원(2015. 3.)의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대규모의 재정안정화 개혁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1998년의 개혁 과정에서는 소득대체율을 70%에서 60%로 낮췄고, 수급연령을 기존 60세에서 '13년부터 매 5년마다 1세씩 조정하여 65세까지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의 제2차 제도개혁에서는 소득대체율을 기존 60%에서 2028년까지 40%로 낮추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나친 저부담-고급여 구조에서 비롯되는 국민연금의 수지불균형 문제가 일정 정도 해소되었음은 물론, 기금고갈시점 역시 기존 2047년에서 2060년으로 연장되어 향후의 불안정한 경제·사회 구조 하에서 최소한의 부담역력(affordability)을 담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국민연금제도는 그동안 적정성과 재정안정성 측면에서 일정한 성과를 달성하며 발전해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풀어야 할 당면과제들이 남아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먼저 적정성 측면

에서는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에 포괄되지 못하거나, 적정한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한 사각지대가 여전히 상당한 규모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 두루누리사업, 연금크레딧 등과 같은 기존의 적정성 강화 조치들의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들 제도의 적용대상이 제도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정책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제도를 홍보하는 노력이 선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향후의 사각지대 추이를 고려하여 이들 사업의 적용 및 보장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재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재정안정성 측면에서는 그동안 수차례의 급여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여 대비 급여 수준이 높아 수지불균형 문제가 상존해 있을 뿐만 아니라, 인구고령화, 경제성장 둔화, 노동시장 불안정성 증대 등과 같은 재정위기 요인들이 점점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국민연금을 둘러싼 재정여건마저 우호적이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제도가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재정목표 및 재정평가지표에 근거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재정안정화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2018년 수행될 제4차 재정계산 과정에서는 제도 내의 수지불균형 문제는 물론, 제도를 둘러싼 경제·사회적 재정위기 요인들을 포괄할 수 있는 재정목표 및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